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33 | 2026.5.26 (2026.5.18~2026.5.2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따라 석유 공급선 다변화, 비축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전기국가로의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벤처투자 모태조합,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새로운 부담금 경감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영상정보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여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하여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오접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 ,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 ,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 ,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 6
-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공정거래위원회)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9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9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재산처) 1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자율주행자동차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1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14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16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1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18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18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1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1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 1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 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2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 21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2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12.)- 보이스피싱 방지 강화 및 기간통신사업 공공성 확보 중심 -
- [에너지·자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조세] Tax Intelligence 5월호
- [소송] 재판소원 제도 도입 4.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결정례
- [공정거래] 알고리즘 담합과 공정거래법 - 최근 입법 논의 및 해외 동향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신설
- [건설/부동산] 지자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사실상 인수인계를 거절했더라도, 해당 시설이 사용되고 있는 이상 관리운영비는 지급해야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선제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사전 가동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5. 6. - 2026. 5. 1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 2030년 100GW 보급 조기 달성을 위한 세부전략 발표 - 재생에너지 세계 10대 강국 도약으로 에너지안보 강화 및 지역성장 견인	2026-05-19
----------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안)’을 토의하였음.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는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번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올해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며,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후속으로 2035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을 제시한 것임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따라 석유 공급선 다변화, 비축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home-grown energy)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밝힘

비전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e,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

목표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

5대 과제 및 10대 전략

① 보급 확대

- ①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에 초대형 플레그쉽 단지 구축
- ② 유휴부지 활용 **4대 정책입지**에 태양광 집중 보급
- ③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ESS 활용 확대**

② 비용 저감

- ④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 제도** 대혁신
- ⑤ 주력전원에 걸맞은 **경제성 확보 메커니즘** 구축

③ 산업경쟁력

- ⑥ 태양광·풍력 무너진 **산업 생태계** 신속 재건
- ⑦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제품 선점

④ 국민 체감

- ⑧ 햇빛·바람·계통소득 전국 확산 (재생e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
- ⑨ 재생e 안전 관리 대전환 (공사·운영·폐기·재활용 전주기 관리 강화)

⑤ 거버넌스

- ⑩全本처·지방정부 재생e 전담부처化 (농어촌·마을·산업 대전환)

공정거래위원회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2026-05-21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임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한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글로벌 AI 개발사 외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음

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임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2026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국방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5-19 시행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과 방위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를 하려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 수의계약의 방법 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대응구매를 추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5-19 시행
-----	---------------------------------	---------------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군의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를 추진하기로 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구매하려는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반영된 소요제기서를 국방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등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그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11-20 시행 예정
-----------	--	------------------

최근 양자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바,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와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2026-05-28 시행 예정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63호, 2025. 5.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하고,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인의 기여 행위나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6-11-20 시행 예정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6-05-19 시행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2026-05-19 시행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관한 사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5-19 시행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14. ~2026.06.0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1호, 2026. 1. 20. 개정, 2026. 7. 21. 시행)되었으므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벤처투자 모태조합,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전화: 044-202-6292, 팩스: 044-202-6052)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18. ~2026.06.10.
-------	------------------------------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새로운 부담금 경감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의 부담금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 및 분할납부 신청·납부기간 등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12, 팩스: 044-201-558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19. ~2026.06.29.
-------	---------------------------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 관리 업무는 현재 지방이양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전산시스템 부재로 인해 업체 관리가 미흡하여 부실업체 등 업체 난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법에서는 법인은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혼란 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구분 및 명확화**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전화: 044-201-3995, 팩스: 044-201-5601\)](tel:044-201-3995)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2.
~2026.06.01.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수집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1482호, 2026. 03. 17. 공포, 2026. 06. 18. 시행)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영상정보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전화: 044-201-3854, 팩스: 044-201-5587\)](tel:044-201-385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5-18 발의
-------	-------------------------------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거래, 예약·주문 서비스, 플랫폼 기반 영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규모와 범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예산 및 기술역량이 부족하여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자체적인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026-05-20 발의
-------	---------------------------------------	---------------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하도급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안 제3조의6)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2026-05-2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불충전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음. 특히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은행의 예금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적 체계 내에서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관리하며 원권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여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수익을 활용하도록 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24조제1항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6-05-20 발의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어 연동약정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약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하여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 5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2026-05-20 발의

현행법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경기침체 속에 지수가 상승하여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일몰기한을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 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17조제1항제2호)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2026-05-21 발의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함)하는 경우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46조의8제1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2026-05-22 발의

현행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정적인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69조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2026-05-19 발의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 및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율하지 않음

이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안 제28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5-18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거래, 예약·주문 서비스, 플랫폼 기반 영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해킹, 악성프로그램 감염, 서비스 장애 등 침해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예산 및 기술역량이 부족하여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정보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자체적인 보안점검, 기술 대응,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보호조치의 이행과 침해사고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 지원,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6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2026-05-21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가 해당 기능과 상호운용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2026-05-22 발의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구독서비스의 해지 과정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를 설정하여 해지를 방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설계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피해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상거래 행위에 한정되어 규제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크패턴 금지행위 규정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디지털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2026-05-18 발의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고용안정 조치를 넘어, 주된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026-05-20 발의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납품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3)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의원 등 10인)

2026-05-19 발의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용량, 접종 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불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오접종 자체에 대한 정의와 관리 및 대응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오접종 발생 시 신속한 통지 및 보고, 체계적인 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와 책임소재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오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관리·감독 및 교육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오접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신설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

2026-05-18 발의

현행법은 전력계통 기여도, 공정 특수성, 국가 기간산업 유지 필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요금지원·감면 근거가 미흡하여, 전력요금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적시에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제철소는 고온·연속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고, 정전·전압변동 등에 취약한 특성상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전력요금 부담이 생산원가 및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탄소중립 전환비용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요 둔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철강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력요금 인상 및 전기요금 구조 변화는 철강업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철소는 전기로·고로 등 공정 특성상 부하변동 대응, 설비 효율화, 자가발전·부생가스 활용, 수요관리 참여 등 계통 안정과 에너지 효율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국가 전력수급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 전력계통 안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2026-05-20 발의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96조의5제1항 및 제108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

2026-05-19 발의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제2종시설물 중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 없이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야구장·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체육시설은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제1종시설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2026-05-19 발의

현행법에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종사자 및 정주 인구에 대한 양질의 주거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며, 특히 무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등의 주거지원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과 같이 다른 개발사업 법령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구로 지정된 토지에는 중복 지정 특례가 있지 않는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복 지정 논란을 해소하고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행안위	전체회의	5/26(화) 10:00	- 현안 질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5/26(화) 08:30	대한민국 발전 모델을 말한다: 혁신과 창의 세미나	김용태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5/27(수) 10:00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안도걸·이정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5/27(수) 14:00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우재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8(목) 13:00	탄소중립과 AX 시대	안태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5/28(목) 18:20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101차 정책세미나 "폐기물의 자원화"	이종배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5/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0호(통권 제298호) 발간	국회도서관	
	5/27(수)	「금주의 서평」 제2026-20호(통권 제779호) 발간		
	5/27(수)	「Data+」 제2026-8호(통권 제32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5/18(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9호(통권 제30호)	국회도서관	
	5/20(수)	「금주의 서평」 제2026-19호(통권 제778호)		
	5/20(수)	「Data&Law」 제2026-5호(통권 제43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5/18(월)	방송통신 (TMT)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12.)- 보이스피싱 방지 강화 및 기간통신사업 공공성 확보 중심 -
5/18(월)	에너지·자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19(화)	조세	Tax Intelligence 5월호
5/20(수)	소송	재판소원 제도 도입 4.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결정례
5/20(수)	공정거래	알고리즘 담합과 공정거래법 - 최근 입법 논의 및 해외 동향
5/21(목)	방송통신 (TMT)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신설
5/21(목)	건설/부동산	지자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사실상 인수인계를 거절했더라도, 해당 시설이 사용되고 있는 이상 관리운영비는 지급해야
5/22(금)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5/22(금)	방송통신 (TMT)	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선제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사전 가동
5/22(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5. 6. - 2026. 5. 19.)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